

# '흡백쇼' 하면서도 '환자대면 면회제한'

### 비대면 아니면 면회 취소...동의없이 이동 제한 "환자 가두고 콘서트·클럽, 나라가 미쳐 돌아가"

코로나19 사태가 3년 이상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환자의 대면 면회가 제한되자 감염병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환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무기한 중단됐다. 외출이나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와 같은 한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유령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는데, 지난 4월 30일부터 접촉 면회를 허용했으나 6차 유행 위험에 약식 달 만에 다시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요양병원·시설과 달리 각 기관별로 면회 규정을 두는 일반 병원의 경우 통상 정부 지침보다 엄격한 면회 규정을 둔다.

이 같은 면회·외출·외박 제한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용돼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김모(30)씨는 "비대면 면회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면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라며 "힘 없이 아픈 분들만 희생해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환자는 자유도, 인권도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초창기엔 감염병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면회 제한이 통용됐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코로나가 몇 년 더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면회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감염병 유행인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환자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8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외출·산책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대면 면회만 제한할 뿐, 비대면 면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면회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은 아예 면회를 차단하기도 한다.

뇌경색으로 시어머니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이모(35)씨는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를 할 곳이 없어서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를 금지한다고 통보가 왔다"며 "면회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요양병원 면회가 풀려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김씨는 "환자는 가둬놓으면서 일상 회복을 한답시고 물 뿌리는 대규모 콘서트, 술집, 클럽은 놔두는 걸 보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

이씨는 "우연히 간호사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한 간호사가 내일 오프(쉬는 날)라며 밤새 달리겠다고 하는 대화를 들었다"며 "퇴근 후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면회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는데 술 먹고 놀고 오겠다는 얘길 들으니 면회만 막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험도 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면회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이 그 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권계철 충남대 교수는 "PCR은 보통 30~35분 유전자 증폭시키는데, 그 정도 증폭을 시키면 설령 무증상이거나 잠복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 유무를 알 수 있다"며 "PCR 음성으로 판정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혁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PCR 검사가 음성이고 24시간 이내라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배출량이 많은 양은 아닐 것"이라며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상대방과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면 감염 전파 가능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반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 대표는 "면회를 제한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정부의 그런 조치가 부족하다"며 "가령 가족을 만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면회가 꼭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 남부소방, 현장대원 정신건강 간담회 개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현장대원 정신건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대형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7월 26일에 관내 공사 현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화순소방, ㈜로컬업과 안전 콘텐츠 제작 업무지원 협약식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7월 27일 ㈜로컬업과 안전 콘텐츠 제작 업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무안경찰, '행복박스'운영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무안군 열린가정센터, 무안군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지난 7월 27일 관내 다문화가정 및 불우청소년 21가정에 가족사진액자 및 생활용품 등을 각 주거지로 전달하였다.

무안=이성기 기자



### 보성경찰,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7월 26일 울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 담양경찰,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현장 홍보활동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최근 하절기 야간활동이 증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 담양 관내 비닐하우스 등 현장을 찾아 농기계 안전 운행 교육과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 '휴가갑니다' 북적이는 김포공항

여름 휴가철을 맞은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태풍 '송다' 여파 내일까지 많은 비...이후 폭염

### 제주도·남해안·지리산 중심 강한 비는 이어져

제5호 태풍 '송다(SONGDA)'의 여파로 오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후엔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7월 31일 기상청 수시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송다는 중국 청다도 남동쪽 370km 해상부근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17m이다.

현재 송다는 상층과 하층의 분리가 시작됐으며 12시간 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다의 약화에도 태풍의 흐름을

따라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가 50~100mm다. 특히 지리산 250mm, 남해안 200mm, 제주도산지 150mm 이상 등 그중에서도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다.

전북,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경북권은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경북북부는 12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는 10~60mm로 관측

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소하천이나 한탄강처럼 유역 면적이 넓지 않은 강은 장대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범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안전한 곳에 계시고 항상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다의 영향에서 벗어난 3일부터는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 오후시간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6일은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동취재본부

### '연쇄살인 혐의' 1심 사형 권재판, 내달 19일 항소심 시작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7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일정을 9월14일로 지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를 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범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1심은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시스